

투데이 칼럼

조화로운 인권, 모두가 지켜야할 권리이자 의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등 인권 관련 노력도가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경찰의 인권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정부 등의 주문이 부각되다 보니 마치 그동안 경찰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잘못해오고 있었다는 듯한 인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인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량하게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 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크고 작은 해를 끼치는 사람 등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권리다. 경찰도 선량한 국민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지탄을 받은 삼례 나라수퍼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등을 보면 일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경찰,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대다



임귀현
순창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수 국민들의 정서일 것이다. 두 사건 모두 20년이 다 되어가는 과거의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 억울하게 인신 구속되어 기나긴 수감생활을 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그 어떤 대가로도 보상되지 않는 치명적인 피해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입은 분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필자가 경찰에 입문한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조직 내에 그런 문화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살인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 검거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못 잡으면 문책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소위 윗선의 압력이 정말 대단하였던, 경찰 내에 비합리적인 문화가 다수 존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두 사건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리한 수사 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당시의 경찰 내부의 상황이 그랬다 하더라도 백번 되풀이봐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다.

지금은 2017년. 경찰은 자체적으로

인권,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개선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물론 전국의 11만 명이 넘는 경찰관 중에 공사생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하여 지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경찰의 인권의식이나 합리적인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모든 사법기관이나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 공무원 조직을 통틀어도 경찰만큼 인권이나 피의자 권리, 대국민 친절 등 서비스에 신경 쓰고 절차를 준수하며 개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조직은 없어 보인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경찰이 국민 인권이나 권리 보장, 평온한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일반 국민들도 경찰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질서는 지키는 성숙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출소 순찰요원 등 대국민 접촉 업무를 하다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

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일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술에 취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의 분풀이 대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 성숙하지 못한 국민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들의 인격을 도외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아말로 진정한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나의 권리를 보장 받으려면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성숙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민주, 인권 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현재 수사권 조정 내지는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인권보호 강화가 전제조건이 된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은 당연히 중시하고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수사권 조정과 경찰 조직 개혁이라는 명제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경찰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나 기본 틀을 지나치게 포기하거나 도의이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 조화롭게 나아가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다. 끝으로 본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둔다.

사설

정치적 쇼로는 전북 발전 어렵다

전북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볼때는 작금이다. 도의회 조사위가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는데 삼성과의 투자 협약 그거 정치적 쇼였다는 것이다. IIF를 경남이 가져간 것에 대해 도민들이 격앙하자 민심을 무마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게 전임 김원주 지사 때의 일이라서 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돌이켜 그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통탄해 마지 않을 일이다. 과연 그런 식으로 일해서 전북 발전이 가능하겠느냐는 물음이다.

어제 삼성투자협약 건이 세월을 길게 끄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정치적 쇼였더니 너무 허망하다. 전북도는 이제 그 책임자를 가려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전북도에게 다시 또 물어볼 게 있다.

기업유치 작업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 지 궁금한 것이다. 도내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시장이 열악한 이유는 많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들리면서 기업 유치의 실속이 적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저번에도 요구했던 바이지만 전북도는 그 보고하는 바가 정치적

고 확실해야겠다. 서류 상으로 유치한 기업들이 많다고 낙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유치 실적 발표가 속빈 강정이 돼서는 안 된다. 기업 유치 실적의 목표 대비 80%나 90%나 하는 언급은 이제 자제돼야 한다.

속내를 들여다보려면 투자 규모가 약소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전북도더러 기업유치 실적 보고가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삼성의 새만큼 투자 협약이 진실이 아닌 정치적 쇼로 드러났으니 그 무슨 해괴한 일이란 말인가. 전북도는 기업유치는 보다 진실해야 한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나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도 진짜로 유치된 기업이다.

투자를 하겠노라고 양해 각서 서명만 해놓고 그 시기를 한정없이 미루다가 파기시켜버린 기업이 삼성 외에도 그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므로 기업유치 보고가 정직해야 한다는 지적은 실제로 기업 유치를 확고히 해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거듭 말하거나 이제 양해각서 서명하는 식의 기업 유치로는 일자리 창출도 고용 안정도 믿을 수가 없다.

동부권에도 발전 기회를 주어야

동부권에도 발전 기회를 주어야겠다.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광역시도 간에 균등한 발전이 소망스러운 것처럼 도내의 각 시군 지역도 균등한 발전이 소망스럽다. 가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동부권에 대한 발전 청사진이 어지러운 정도이다. 그런데 그게 말뿐인지 어찌 실속이 없다. 구체적으로 평가해 줄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동부권의 거주 인구가 서부권보다 대폭으로 줄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동부권에는 발전의 기회보다 낙후의 기회만 강요되었다.

지난 정부 때 있었던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침만 해도 그렇다.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 죽이기라 아니하는 반발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그 대상 지역이 무주 진안 장수 와 임실 순창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동부권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도가 저번에 동부권발전위원회 모임을 개최한 것은 잘한 일이다. 동부권의 발전은 동부권 주민 모두의 열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실현 방식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 동부권에 발전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당부가 수없이 반복됐던 거라며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전북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그런데 그 낙후된 중에서도 도내의 동부권은 더욱 낙후돼 있다. 그런 세월이 한 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이다.

동부권에도 발전의 기회가 많아야겠다. 동부권 주민들은 교통 인프라 기업 유치며 아쉬운 게 하나 풀이 아니라는 호소이다. 그런데 이제 교육 혜택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동부권은 인구 감소로 해마다 왜소화 현상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인근 임실군과 순창군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그쪽의 발전을 위해 보다 더 힘을 실어줄 일이다.

독자제언

데이트 폭력, 주변에서 관심 가져야

31일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이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로, 지난해 연인 간 폭력 8천여명 입건을 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675명(8.8%)가 증가한 수치다.

데이트 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112신고 출동 시 현장출동 강화 및 긴급 상황 시 수사전담반도 동시에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데이트 폭력의 처벌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보복 목적인 경우 가중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시행하는 '피해자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타 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연인 사이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한다.

최현아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독자제언

'드론 몰카' 명백한 범죄행위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표적 삼아 몰래 촬영하는 '드론 몰카'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안을 몰래 엿보고, 풀빌라 수영장, 해수욕장 해변의 노천 사우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타인의 신체를 촬영 하는 대담한 범죄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주고 있다.

드론은 개인이 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어 대중화되면서 몰카행위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다.

'드론 몰카'는 몰카범죄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촬영이 아닌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중범죄이다. 드론으로 비행하고 촬영하는 경우 잘못 된 생각과 행동이 바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윤철 전북청 경찰관리과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